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15
----------	------

발의연월일 : 2025. 1. 17.

발 의 자 : 강선우 · 서미화 · 김윤덕  
소병훈 · 정태호 · 박주민  
고민정 · 전현희 · 남인순  
박해철 · 장경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  
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  
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  
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 나.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피해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피해보상 청구인, 의료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제출·청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한 피해관련 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내용 및 대상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제6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등의 지원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또는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 간의 상관관계가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 가능할 것
3. 질병등의 발생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의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보상 등의 통지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으로 인해 당초 통지된 결정기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제16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상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본다.